

##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 분석 : 6·25전쟁~1970년대를 중심으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 논문요약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DMZ, 6.25전쟁, 북한의 대남전략, 도발·침투, 남북무력충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자조적·공조적 국방

## I. 서론

한반도는 지구상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다(정주신 2020, 112; 김현정 2021, 64). 분단 후 남북관계는 한편으로 전쟁·갈등·대결로 상처를 입혀왔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30). 북한의 남침으로 개시된 6.25전쟁, 1960년대 무장공비 침투사건들, 1970년대의 도발과 1980년대의 아웅산 및 KAL기 폭파테러사건들, 1990년대 이후의 서해교전들이 그러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그러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a, 39).

남북간 무력충돌은 지난 70여년간 여러 차례 나타났다. 남북간 충돌은 인명피해와 함께 물질적 피해를 초래했다.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내에서 발생한 각종 총격사건, 무장공비 침투와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DMZ 목함지뢰사건 등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사건은 비군사적인 남북충돌로 인해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a, 66-67).

한반도의 DMZ는 1950년 발발한 6.25전쟁(Korean War)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休戰)됨으로써 생겨났다. DMZ는 6.25전쟁이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이다. DMZ는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다(경기학연구센터 2019, 168).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정주신 2021, 31). DMZ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고, 현재 한반도 DMZ와 그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첨예하게 남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무력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한모니까 2019, 163). 특히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본 논문은 6.25전쟁이후 19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DMZ의 정의와 범위, 정전협정~1970년대 DMZ내 북한도발·남북간 무력충돌분석, DMZ내 무력충돌(한국전쟁~1970년대)의 전개, 시사점과 교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II. DMZ의 개념과 범위

### 1. DMZ의 개념 및 의의

#### 1) DMZ의 개념

한반도의 DMZ는 세계냉전의 형성기에 열전(熱戰)을 통해 탄생했다. DMZ란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서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를 뜻한다. 한반도에서의 DMZ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전쟁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협정의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DMZ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지역에 대해 비무장화를 선언한 국제법상의 조치이다. 따라서 DMZ는 국제법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이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창설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 현실적인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잠정적인 평화를 담보해 냄으로써 군비통제 내지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DMZ는 완충지대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과 관계없이 크게 보아 다음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즉 ① 비무장화, ②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③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④감시기구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 2) DMZ의 의의

한반도에서 DMZ는 전쟁과 분단의 현실이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다(이효원 2012, 45-85). 생태계적 가치(ecological value)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물로서의 안보적 가치(security value)로 인하여 전 세계적 관심지역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 시대, 나아가 국토통일의 시대를 고려해 볼 때 DMZ는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DMZ 평화적 이용방안연구에 관해서는 박영민 2019, 43-94; 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도 있다(김강녕 2021, 182).

남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DMZ 내의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로 거리가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GP부터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GP는 남측 11개, 북측 11개 등 모두 22개였으며(김진선 2018), 2018년 남북은 나란히 GP 파괴현장을 검증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가 급속히 악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머지 GP 철거는 ‘유야무야 됐다. 현재 DMZ 내 GP는 한국군 60여개 북한군 150여개가 남아있다. 추가적인 GP 철거를 위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

된다(최평천 2020).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안에는 군사시설물 설치나 군사장비 반입이 불허된다. 그러나 북한이 DMZ 내에 GP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적으로 세워졌다. 우리 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설치해 운용해왔었다. 남북 GP 중 가장 가까운 거리는 휴전선과 700여m 떨어져 있다. 현재 남북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 2천여명 가량이다(김진선 2018).

## 2. DMZ의 범위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경계선 및 북경계선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DMZ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를 지정하여 4km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DMZ의 면적규모는 육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km<sup>2</sup>의 1/250에 달하는 총 907km<sup>2</sup>(2억 7천만평)이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또한 DMZ의 공간의 구체적 획정을 위해 군사분계선 표지판 제0001호를 임진강 강변(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 세우고, 마지막 제1,292호 표지판을 동해안 동호리(강원도 고성군)에 설치하였다. 군사분계선의 표식으로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워 육상으로 248km(155mile), 서해해상 약 200km(125mile)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했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한반도 DMZ 일원의 공간구성을 보면, DMZ 일원은 통상적으로 ①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DMZ, ②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지역(CCL), ③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길이 103km(총 248km의 41.5%, 이 중 강원도가 145km), 넓이 153km<sup>2</sup>(남

### 332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6호 (2021)

측 453km<sup>2</sup>의 33.8%, 이 중 강원도가 300km<sup>2</sup>에 이르는 지역이다. DMZ 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기는 하나 여전히 군사적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휴전선 남쪽 5~20 km 구간을 말하며 면적으로는 총 면적 1,528km<sup>2</sup>(약 7억 평)이다(정일환 2013).

이 민간인 통제선내에서는 민간인 거주와 산업·기타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DMZ, 민통선지역, 접경지역과 관련된 것으로는 한강하구중립지역(Neutral Zone, Hangang River Estuary)과 NLL을 들 수 있다(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 III. 정전협정~1970년대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의 전개

### 1. 북한의 대남침투·국지도발 개요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0년 6.25전쟁 이후 2020년까지 북한의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은 침투 2,002회, 국지도발 1,118회, 합계 3,120회의 실로 엄청난 북한의 침투·도발이 자행되었다(<표 1> 참조).

<표 1>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계	3,120	398	1,336	403
침투	2,002	379	1,009	310
국지도발	1,118	19	327	93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
227	250	241	264	1
167	94	16	27	0
60	156	225	237	1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20, 319.

<표 1>에서 2020년의 1회의 국지도발은 2020년 5월 3일 철원지역

북한 GP에서 아군 GP로 총격(4발 피탄)을 가한 도발을 말한다(대한민국 국방부 2020, 319). 1960년대 북한의 침투는 1,009건이고 북한의 국지도발은 327건으로 합계 1,336건이었으며,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960년대였다. 북한의 천안함 치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해인 2010년에 발간된 ‘한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제목의 미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의 한 보고서도 1960~70년대에 한반도 분쟁희생자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 외교협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는 모두 1,436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남·북·미군 1,554명(북한 887명, 한국군·경 416명, 한국 민간인 162명, 미군 89명 등)이 사망하고 1,16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Kim, Young June 2010).

1960년대 무력충돌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 시기에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에 근거를 두고 대남전략을 공세적으로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지하당 건설 시도와 남조선 혁명운동을 위한 방편으로 수많은 무력도발을 감행했다(김강녕 2015, 8). 북한의 무력도발은 내부 체제결속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중소갈등의 첨예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대내적으로는 4대군사노선의 정립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정립과정과 숙청 등 김일성의 리더십 수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박영민 2018, 121). DMZ를 포함한 남북무력충돌은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에 집중되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1970년대의 경우 북한의 침투 310건, 북한의 국지도발 93건, 합계 403건이다. 이처럼 1960~70년대를 정점으로 198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은 있었으나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박형준 2018, 218; 박형준 2020, 416-417).

## 2.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 분석

## 1) 정전협정 체결~1950년대: 북한의 간첩단 및 테러사건

휴전(정전) 후 북한은 복구를 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대남전략의 주축을 주로 위장평화공세에 의한 선전전에 두고 각종협상을 제안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북한은 경제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한국은 정치정세가 혼미를 거듭하자 소규모 간첩단을 중심으로 대남공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1955년 어선 대성호 납북사건(5.28), KNA 항공기 납북사건(1958.2.6)과 같은 소규모의 테러사건 이외에 간첩 김정제사건(1957.8.2), 진보당사건(1958.1.12), 1958년 창랑호 납북사건(2.16) 등의 대남도발이 있었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증폭될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국방부 1998, 283; 김강녕 1999, 254). 하지만 1950년대에는 628건의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있었다(김득주 1998, 19). 그러나 이 시기는 정전협정이 비교적 가장 잘 지켜진 기간으로서 전후복구에 역점을 두고 대남평화공세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위반만 있었다고 할 수 있다(박헌옥 1998, 29).

## 2) 1960년대: 청와대 기습·무장공비 침투 및 미 해군함 나포 등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국력신장의 여건을 마련하고 반공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자극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서둘러 추구하고 대규모의 대남공작을 전개했다. 1960년대 도발 및 침투건수는 북한 해군의 어선 6척 나포사건(1961.4.7), 해군함정 PCE-56함 격침사건(1967.1.19), 북한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31명의 무장공비에 의해 도발된 ‘청와대기습 미수사건’(1968.1.21), 미 해군 전자정찰함 ‘푸에블로(Pueblo)호 피랍사건’(1968.1.23), 124군부대 무장공비들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1968.10.30~11.2), EC-121기 격추사건(1969.4.15),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1969.12.11) 등 대규모 도발을 포함한 2,187건에 이른다(국방부 1998, 283). 1960년대에



들어 정전협정 위반사건은 7,544건으로 1950년대에 비해 10배가 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김득주 1998, 19; 김강녕 1999, 254).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무장한 게릴라를 침투시켜 박정희 대통령 등 남한의 요인을 암살하려 했던 이른바 ‘청와대 기습사건’을 일으켰다. 1968년 1월 21일에 북한군 제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여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사건으로 7명의 군경과 민간인이 북한의 무장공비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북한이 대남 게릴라전을 목표로 창설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부대 무장공비 특공대 31명이 서울까지 침투하여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 사건은 한국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대담성 외에도 특공대의 침투능력을 과시한 사건이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b, 40).

이 사건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예비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후 북한의 남파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여 군대 내에 공비전담 특수부대가 편성되었고 전방에는 155마일 휴전선 전역에 걸쳐 철책선을 구축했다. 이 철책선은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냉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b, 40).

다음으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을 보면,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하여 침투시켰다. 이들은 소수부락을 점령하여 군사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가치가 있는 인사의 대동월북, 군사·경제·사회분야의 정보수집 등을 목표로 한 게릴라 활동을 시도했다(박헌욱 1998, 29-30). 11월 3일 새벽 주민들을 모아놓고 만행을 저지른 무장공비들에 대해 한국의 군경과 예비군이 본격적인 토벌에 착수해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군경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 6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희생을 치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93; 국립통일교육원, 2021b, 40).

이 이외에도 미 해군 전자정찰함 ‘푸에블로(Pueblo)호 피랍사건’(1968. 1.23.)도 당시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 요컨대 1960년대 북한의

도발은 육상, 해상, 공중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서 한국군, 민간인, 미군 등 대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박헌옥 1998, 30).

### 3)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남침용 땅굴굴착 등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조선혁명론에 기반을 둔 대남정책을 계속 구사했다. 물론 1970년대 초반의 국제적인 해빙무드와 닉슨독트린으로 분단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완화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북한은 간헐적으로 도발을 일으켜 남북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28; 국립통일교육원, 2021b, 40-41). 1970년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건수는 49,404건으로 1950~6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 북한의 주요침투는 403건, 국지도발은 310건으로 196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고는 해도 1960년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도발건수다.

1970년대의 대남도발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땅굴을 파는 화전 양면전술을 구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요인암살 및 군사적 정면도발로 점철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경제성장으로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북한의 직접적인 게릴라 침투전술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회담 개최되고 7·4공동성명의 발표로 이어졌다(국방부 1998, 283). 하지만 7·4공동성명 직후 김일성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이춘근 2021).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도 당초에 목적인 혁명역량의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1973년 8월 대화단절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비합법적인 대남공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70년대 위기사건으로 지목할 만한 사례로는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한 ‘국립묘지 시한

폭탄 장치사건(1970.6.22.), 문세광 대통령 저격사건(1974.8.15), 기습 남침용 땅굴굴착, 그리고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을 들 수 있다(국방부 1998, 283-284). 이외에도 파주·금촌 간첩사건(1970.4.8), 소흑산도 간첩선격침사건(1971.4.8), 김포 무장간첩사건(1971.9.17), 제주 우도무장 간첩사건(1973.3.4), 20사단지역 간첩침투사건(1977. 5.3) 등과 같은 대소의 대남도발이 잇따랐다(김강녕 1999, 255).

1970년대의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도발과 남북무력충돌사건으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남침용 땅굴굴착도발과 북한경비병 30여명에 의해 저지른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을 들 수 있다.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는 김일성의 강조 속에서 만들어진 20개 정도로 추정되는 땅굴 중 고랑포 제1땅굴(1974.11.15), 철원북방 제2땅굴(1975.3.19), 판문점 제3땅굴(1978.10.17)이 남북대화 기간을 전후로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전술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당시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소속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국군과 미군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한편, 유엔군 트럭 3대와 초소를 모두 파괴했다. 사건 발생 후 주한 미군사령부는 전투준비 태세(데프콘3)를 발령했으며, 오키나와 등지의 전폭기 대대 및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항공모함 레인저호와 미드웨이호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태세를 취했다. 한·미 양국의 강경한 태도에 북한의 김일성은 8월 21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b, 41). 북한의 남침용 땅굴굴착도발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은 절을 달리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DMZ내 북한의 주요도발: 땅굴도발과 판문점도끼만행사건

#### 1) 북한의 남침용 땅굴굴착의 배경·경위·의도·현황

북한은 1960년대 말 아군의 비무장지대(DMZ) 경계용 철책보강으로 남파간첩의 지상침투 성공률이 급격히 감소하자 새로운 침투방법을 모

색하던 중 베트남(월남)전에서 월맹군이 사용한 땅굴전술에 착안하여 1971년 9월 25일 인민무력부 고위회의 석상에서 DMZ 지하관통 명령인 ‘9·25 전투명령’을 김일성이 직접 하달했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89). 이 때 김일성은 “하나의 땅굴이 10개의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요새화된 현 전선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일인 197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1972년부터 노동당 및 인민무력부의 직접적인 작업통제하에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남침땅굴을 굴착하기 시작했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89).

제1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서부전선 고랑포 지역에서 수색대가 DMZ를 수색정찰 중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상징후(異常徵候)로 판단하여 굴토(掘土)한 결과 북한이 파 내려온 땅굴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북한의 땅굴굴착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제2땅굴은 1972년부터 철원지역에서 청취된 지하폭음을 집중 분석하여 땅굴존재 예상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실시하던 중 1975년 1월 26일 적 땅굴에 적중했으며, 뒤이어 땅굴확인을 위한 역갱도(逆坑道)를 굴착하여 1975년 3월 24일 적 땅굴에 관통하게 되었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90). 제3땅굴은 1974년 귀순한 김부성의 땅굴공사 첩보제보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했으나 땅굴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1978년 6월 10일 이미 시추해 놓은 시추공(試錐孔) 중 1개가 폭발함으로써 역갱도 굴착공사를 실시, 1978년 10월 17일 적(敵) 갱도에 관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다(홍성준 2012).

제3땅굴 발견 이후 군에서는 북한의 땅굴을 찾아내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미군과 합동으로 탐색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기술진의 참여로 새로운 탐사장비의 개발과 탐사기술연구를 계속해왔으나, 넓은 지역에서 예상출구에 대한 정확한 방향선정이 어렵고, DMZ 내 작전으로 인한 탐지활동 제약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장비운용능력의 제한 등으로 수백미터 지하에 있는 2m크기의 땅굴을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보도를 했다가 자연동굴로 판명될 경우 정부발표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역선전 공세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도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의 예상되는 방해활동과 역대책(逆對策)을 감안, 철저한 보안유지하에 역갱도 공사를 진행했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90-91).

1990년 3월 3일 오전, 적 땅굴로부터 관통 3m전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보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생생한 관통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내외 기자 40여명을 현장으로 안내, TV모니터로 참관하는 가운데 나머지 역갱도 굴착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13시 38분 드디어 적 땅굴에 관통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측이 중·서부전선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 걸쳐 땅굴 굴착에 의한 북한의 남침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91).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수많은 땅굴을 굴착한 저의는 이 땅굴을 이용하여 개전초 경보병 및 특수부대를 대규모로 은밀 침투시켜 아군의 전방 주력부대를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전면적인 기습효과를 증진시키고 후방에 침투한 특수전 부대와 연결하여 제2전선을 형성, 전국토를 동시 전장화하는데 있다(백봉종·박동찬 1995/2013).

또한 전·후방에서 병참선을 차단하여 병력과 보급의 전방증원을 막고 수도권을 포위 역공(逆攻)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도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의 일환으로써 지상, 해상, 공중 외에 지하를 통해서도 남침공격을 하려는 기도(企圖)라고 볼 수 있다. 땅굴이 아군작전에 미칠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이 전선지역 주요접근로를 목표로 한 점으로 보아 개전 초에 대규모의 병력을 은밀히 침투시켜 주요도로 및 시설을 장악하고 전·후방간 병참선을 차단시킴으로써 아군작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93).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중에도 땅굴굴착이 진행되었다. 대화의 미소는 침략은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우리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려는 술수였음이 땅굴발견으로 여실히 입증되었다(홍성준 2012). 아직도 155마일 군사분계선 전역에는 북한이 파놓

은 땅굴 2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항공사진, TNT폭발음, 귀순자 제보 등에 의한 종합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1990, 93; 중앙일보 1990/9/5, “한심스런 북의 땅굴 전략”). 따라서 군은 최첨단 과학탐사 장비와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현대과학공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가능시되는 예상땅굴의 출구지역에 대해서는 수색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장애물 설치, 경제대책 수립 등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작전대비태세 유지노력이 현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2)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의 배경·경위·결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살해한 사건을 말한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북한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 핵심적인 대외적 동기는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북침위협’으로 역선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휴전(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닌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명분을 제거하여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실현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북한의 대내적 동기는 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 세습에 따른 내부권력투쟁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무력증강과 이를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 추진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즉 이와 같이 식량난과 생활고로 누적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임전태세가 필요했고, 또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시에 준하는 비상태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김양수 201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초소가 서로 중첩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은 유엔군과 조율 없이 남쪽지역에 5개의 초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유엔군의 초소는 북한군의 초소에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3초소는 JSA남쪽 모퉁이에 자리 잡았고,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 오는 북한측 출입통로의 초입이기도 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1970년대 초 유엔측은 3초소를 설치하고, 그 북쪽에 3초소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5초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제3초소와 제5초소 사이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나 양 초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1976년 8월 6일 한국인 노무단(KSC) 노무자 6명과 유엔사 경비병 4명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때, 북한 경비병이 그들의 목적을 묻은 뒤에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가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에 이들은 철수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비병력 10명, 노무자 5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작업반이 나무 주변에 도착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다. 몇 분 후,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9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 가운데 북한군 중위인 박철이 작업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유엔사 작업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11시 경 10여 명의 북한군 경비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북한군 병력은 3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박철은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인 노무자들은 작업을 중지했지만, 미군 책임자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는 노무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그 직후 박철은 “죽여!”라고 소리치면서 보니파스 대위를 때리자, 북한군들이 달려들어 보니파스 대위를 쓰러뜨렸다. 그 중 몇 명이 주위에 있던 도끼로 보니파스(Arthur George Bonifas)의 머리를 가격했다. 또한 함께 있던 베렛(Mark T. Barrett) 중위도 공격받았다. 4분간의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측 경비대는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모두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미군 장교 2명은 결국 후송 중에 사망

했고,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미군 사병 4명 등 총 9명은 부상을 당했다(위키백과 2021,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북한군의 공격으로 유엔사 제3초소가 완전히 부서졌고, 현장에 있던 유엔사 트럭 3대도 돌에 맞아 유리창이 모두 부서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사건발생 직후 유엔군사령관인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장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에 제시할 항의문 작성과 유엔군사령관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하며, 상세한 내용을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 사건 다음날인 8월 19일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북한군의 행위를 비난하며, 이 사건 이후 벌어지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한편 미국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 강화, 오키나와의 미군 전투기의 한국으로의 재배치, 미 본토의 전폭기 한국 이동 등 군사조치를 단행했다.<sup>1)</sup> 또한 방어준비태세 데프콘-3(DEFCON 3)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19일 17시를 기해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의로 전 군대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북한의 모든 정규군과 예비군 병력에 대해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명령을 하달하는 등 북한 전역을 비상체제로 돌입케 하고,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등 선전공세를 강화해 나갔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이러한 대결상태에서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장군은 미루나무 절단작전인 ‘폴 버년(Paul Bunyan)작전’을 8월 21일 실행하도록 명령했다. 폴 버년작전은 미 2사단 병력과 한국군 제1공수특전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8월 21일 오전 6시 4분경 이들 특수임무부대가 트럭을 타고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작전은 시작되었다. 8월 21일

1) 미국은 백악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 고위관리들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F-4전폭기, F-111전폭기 각 1개 대대를 한국기지에 배치하고, 핵항공모함 레인저호를 한국해역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B-52폭격기를 급거 출동시키고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 1,800명을 한국에 증파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김양수 2017).



새벽 7시 데프콘 2(전쟁돌입상태)하에서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작업에 나섰다. 7시 40분경 공병들에 의해 미루나무가 절단되었고, 8시 30분경 이 작전에 투입된 모든 병력이 철수함으로써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김양명·이성호 1995/2013). 이 사건으로 남북한은 준전시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중국과 소련도 감히 북한을 두둔하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도끼만행사건은 후계체제 아래 권력을 키워가던 김정일이 주도한 ‘계획된 기습’이었다. 유엔군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문제의 미루나무의 절단은 물론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 초소 4개도 파괴하여 보복대응을 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8월 21일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UN군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9월 1일부터는 판문점공동경비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경비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은 19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잘라낸 미루나무 자리에는 현재 희생자의 추모비가 있다(이석구 2021).

미국의 미루나무 절단작전인 ‘폴 버년(Paul Bunyan)작전은 만일 북한이 저항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가운데 수행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김양명·이성호 1995/2013). 1976년 공동경비구역에서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남북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이용하여 반공정책을 강화하면서 내부의 단속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활용했다(천재교육편집부 2021, ‘판문점도끼만행사건’).

## IV.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의 특징과 시사점

### 1. 북한의 무력도발의 특징

무력도발(武力挑發, armed provocation)이란 적이 특정 임무수행을 위해 병력이나 장비를 출동시켜 대한민국(상대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국방기술품질원 2008, ‘무력

도발’). 국제적 무력충돌(武力衝突, armed conflict; a clash of arms)이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6.25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남북간 무력충돌은 대부분 DMZ를 포함한 육상지역에서 발생했고 간첩침투와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연도는 1968년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점차적으로 무력충돌이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약간의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체제결속을 위한 북한군부의 의도적 도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전략과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내외적 정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전략과 전술을 변화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 ②체제결속의 강화,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 등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들 수 있다. 6.25전쟁 발발원인은 북한의 무력통일전략과 세계적인 냉전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남한을 소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대남인식하에 북한에 민주기지를 건설한 다음 북한의 혁명역량으로 남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한다는 민주기지에 입각한 대남정책을 추진했다. 6.25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기도했으나 실패한 이후 남조선 자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조국통일을 완성한다는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한 대남전략으로 변화시켰다. 이후에도 북한은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의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전략과 전술에서는 변화를 추구했다.

1970년대 들어 중소갈등 심화로 무력통일 후원세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의해 동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 등 대남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적화통일을 위한 대내외적인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때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바꿨다. 북한은

소위 3대혁명역량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북한의 무력도발은 북한의 체제결속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DMZ 군사도발과 1·23 푸에블로호 침입사건(1968)을 『로동신문』을 통해 상징조작화하여 당시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켜 체제결집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흔들리던 김일성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나갔다(박형준 2019, 297).

남북간 무력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연도는 1968년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점차적으로 무력충돌이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약간의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이때도 체제결속을 위한 북한군부의 의도적 도발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지속적 무력도발로 인한 남북분단 고통의 심화를 들 수 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면서 분단의 고통을 한층 심화시켰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서 갈등과 대결국면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형성되었다. 북한이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시작으로 무장간첩, KAL기 폭파 등 대남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갈등과 대결구도로 치달았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58).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생한 북한의 무장 게릴라 침투사건 및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면서 분단의 고통을 한층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대북한 위기의식과 반공 분위기를 확산시켰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94).

요컨대 1950~60년대는 ①상호 체제부정 및 적대, ②갈등과 대결양상의 지속, ③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한 무력도발 고조 등의 특징을 보인 시기였다. 1970년대 초 남북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대화가 진행되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58). 하지만 바로 이어서 대화를 중단하고 체제대결과 무력도발로 나아갔다. 북한의 수많은

은 남침용 땅굴굴착과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 2. 시사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비전)가 없다”라고 했다. “역사를 잊으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45만여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해 왔는데,<sup>2)</sup> 이것은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선 남조선혁명과 후 공산화통일’로 요약되는 대남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체제적 특성유지를 위한 이러한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김강녕 1999, 258).

DMZ는 냉전사의 산물이자 성찰의 공간이다. 최근까지 자행해온 북한의 무력도발(DMZ도발을 포함한)은 기존의 체제적 특성 및 대남전략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도발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김강녕 1999, 258-260).

첫째, 1970년대 대화·도발사례가 보여준 북한의 위장평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평화분위기가 고조될 때 오히려 땅굴을 파고 지하당 공작을 강화하는 우회전술을 선택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은 육상, 해상, 공중은 물론이고 지하땅굴과 해저 잠수함 이용 등 동원가능한 모든

2) 물론 북한은 1991년까지 유엔군측 협정위반이 454,605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군측 실제 위반건수는 16건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성호 1998, 236).

수단을 총출동했으며, 도발장소도 전후방을 망라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제3국과 공해상에서도 강행되었다. 도발의 대상도 군인, 민간인, 해외 근로자, 그리고 국가원수 및 탈북귀순자 등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헌옥 1998a, 33).

둘째, 북한의 체제존속을 위한 대남혁명노선과 적화전략의 전술적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어떠한 무력도발조짐에 대해서도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보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무력도발 불용은 오랫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원칙 중의 하나로 존재해왔던바 실제적으로 무력도발에 대해 충분히 억제·방어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무력도발을 민간·군이 합심하여 충분히 억제·방어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김강녕 1999, 258-259).

셋째,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접근과 관련해서 통일지상주의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지양되어야 한다(정용석 1998, 64-65). 우리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면서 통일을 추구한다면 현실(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이상(과업)을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통일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은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통일지상주의나 ‘통일은 10년 내에 가능하다’든가,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근거없는 낙관론 등은 안보의식을 풀어헤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되, 한시도 대북 경계태세 및 유사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김강녕 1999, 259).

넷째,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반세기 동안 추구해 온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을 너무 쉽게 보고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령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체제로서 생존을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일정수준의 긴장유지를 필요로 하는 체제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 같은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는 부분적인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으로 달

라지기보다는 그들의 체제적 특성과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는 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접근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김강녕 1999, 259-260).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의 양극을 오가며 진자(振子)운동을 해왔다.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한반도 분단갈등은 속적관계의 장기갈등 성격을 지닌다. 최고지도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의한 제도화된 대결의지로 고착된 속적관계로 인해 장기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다(이창희·김용현 2017, 41-82).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발전을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58). 이를 위해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해왔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북한의 당규약, 사회주의헌법, 노동신문과 대남방송, 그들이 내세워 온 표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남무력적화전략노선이 전술적으로는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정책적·전략적으로는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김강녕 1999, 247).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이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핵·미사일 도발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향후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군사도발에 의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그 어떠한 공세적 대남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위태세로 북한의 무모한 기습도발과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국방부 1998, 286).

향후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축·관리·유지에 힘써 나가야 한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선행적인 안보능력기반의 확충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경기학연구센터. 2019. 『경기도 역사여행』.
- 국립통일교육원. 2021a. 『2021 통일문제이해』.
- 국립통일교육원. 2021b. 『2021 한반도 평화이해』.
- 국방기술품질원. 2008.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국방부. 1998.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국방사건사』 제1집.
- 김득주. 1998. “휴전협정 체결경위와 주요쟁점.” 『군사논단』 통권 제16호(가을호), 11-20.
- 김강녕. 1999. 『한반도군사안보론』. 서울: 대왕사.
- 김강녕. 2015.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9권 제1호, 17-40.
- 김강녕. 202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보장: 현황과 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5권 제1호(여름호. 통권 제9호), 163-204.
- 김양명·이성호. 1995/2013. “판문점도끼만행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양수. 2017. “6/25전쟁外 극단 전면전&전면적화위기모면 주요역대 전례들: 1.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자유북한방송』(8월 19일 01: 34).
- 김진선. 2018. “‘남북 정상회담’ 연내 GP 22곳 철수, 휴전 후 무력충돌만 80회 ‘위협’ 줄인다.” 『연합뉴스』(9월 19일).
- 김현정. 2021.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제5호, 63-88.
- 대한민국 국방부. 1990. 『국방백서 1990』.
- 박영민. 2018. “DMZ 군사충돌 사례와 요인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4호, 121-150.
- 박영민. 2019. “DMZ 평화적 이용방안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제2호(겨울호. 통권 제6호), 43-94.
- 박헌옥. 1998.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반세기.” 『군사논단』 통권 제16호(가을호).



21-34.

- 박형준. 2018. “DMZ 평화 창출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동북아연구』 제33권 제2호, 205-236.
- 박형준. 2019.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279-311.
- 박형준. 2020. “경향신문을 통해 본 남북한 충돌의 양상과 그 유형.” 『한국군사학논총』 제76집 제3권, 391-420.
- 백봉종·박동찬. 1995/2013. “땅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석구. 2021.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한반도 평화,” 『데일리 임팩트』(8월 21일).
- 정용석. 1998. “대북정책이 지켜야 할 10계명.” 『자유공론』 (3월호), 64-65.
- 정주신. 2020.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제4호, 111-152.
- 정주신. 2021.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제5호, 31-62.
- 정일환. 2013. “DMZ, 전쟁의 상처에서 ‘한반도의 역사’로 비상한다.” 『경기도뉴스포털』 (3월 15일).
- 천재교육편집부. 2021. 『학습용어사전 한국사』, ‘판문점도끼만행사건.’
- 최평천. 2020.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210여개 철거는 언제…북한 호응이 관건.” 『연합뉴스』(1월 21일).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2016 통일문제이해』.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2019 통일문제이해』.
- 한모니까. 2019.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사학연구』 제135호(9월), 163-206.
- 홍성준. 2012. “34년 전 1978년 10월17일 남침용 제3땅굴 발견: 북한의 대남땅굴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블루투데이』(10월 17일).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2021. 『위키백과』(11.13).
- “한심스런 북의 땅굴 전략(사설).” 1990. 『중앙일보』(9월 5일).
- Kim, Young June. 2010. “A Crisis at Your Front Door.”(12월 3일).  
[https://blog.naver.com/luvan00/20117996221\(searchdate:](https://blog.naver.com/luvan00/20117996221(searchdate:)

**352**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6호 (2021)

October 1, 2021).

경기도 의정부시 정책과. 2021. “비무장지대: 공간으로 보는 DMZ”(10월).

[https://dmz.gg.go.kr/gg\\_dmz-intro/](https://dmz.gg.go.kr/gg_dmz-intro/)(검색일: 2021/09/27).

이춘근. 2021. “이춘근의 국제정치: 1회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대책”(8월 29일).

<https://youngchanh2.tistory.com/286>(검색일: 2021/09/28).

투고일 : 2021년 10월 4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9일
--

\* 김강녕은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화정치연구원장, 해병대발전자문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공저) 등이 있다. 그 외 국제정치, 군사안보 등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 &lt;Abstract&gt;

## Analysis of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inter-Korean Armed Conflict in the DMZ : Focusing from the Korean War to 1970s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Since the creation of the DMZ, the highest level of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was in the 1960s and 1970s du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he occurrence of inter-Korean military clashes.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in the 1960s and 1970s are characterized by ①planning as part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 ②continuing to strengthen system solidarity, ③deepening and expanding inter-Korean division pain.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trategy and armed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①thorough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disguised peace offensive, ②strengthening security capabilities to flexibly respond to any armed provocation, ③avoiding groundless unification groundism and optimism, ④promoting a gradual and step-by-step approach to North Korea's change. Our defense should always be able to prepare for the worst. We should do our best to strengthen our self-help and cooperative defense security capabilities to suppress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s at any time and cope stably in case of an emergency.

**Keywords** : Korean War,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Provocation and Invasion, Inter-Korean Armed Conflict,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North Korea's Invasion from North Korea-based Tunnel, Self-help and Cooperative Defense